

국민 10명중 9명 “언론 혐오 조장 보도 자제해야”

최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8월 27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혐오표현 경험과 국민인식조사’ 결과, 조사 응답자 중에서 약 절반인 49.1%가 언론이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7~8명은 혐오표현이 사회갈등 심화(78.4%), 혐오범죄 연결 가능성(81.8%), 차별현상 고착화(71.4%)를 우려해, 미디어의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혐오표현 대응정책으로 약 10명 중 9명이 ‘언론의 혐오

조장 보도 자제(87.2%)를 선택 언론이 혐오표현을 촉발시킬 수도 있지만 이를 시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는 지난 3월20~22일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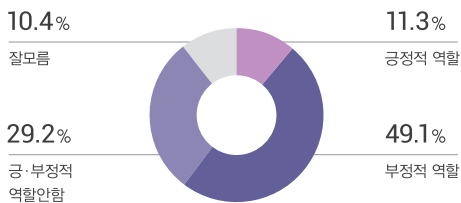
강문민서 인권위 혐오차별대응 기획단장은 “혐오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 핵심 영역에서 혐오표현 대응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혐오표현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AA**

이수지 susie@ka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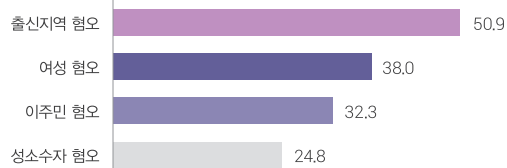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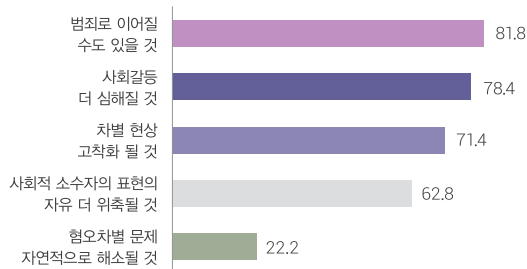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 역할



언론조장 심각한 혐오 유형(1~2순위)



혐오표현 관련 전망 등의 정도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

